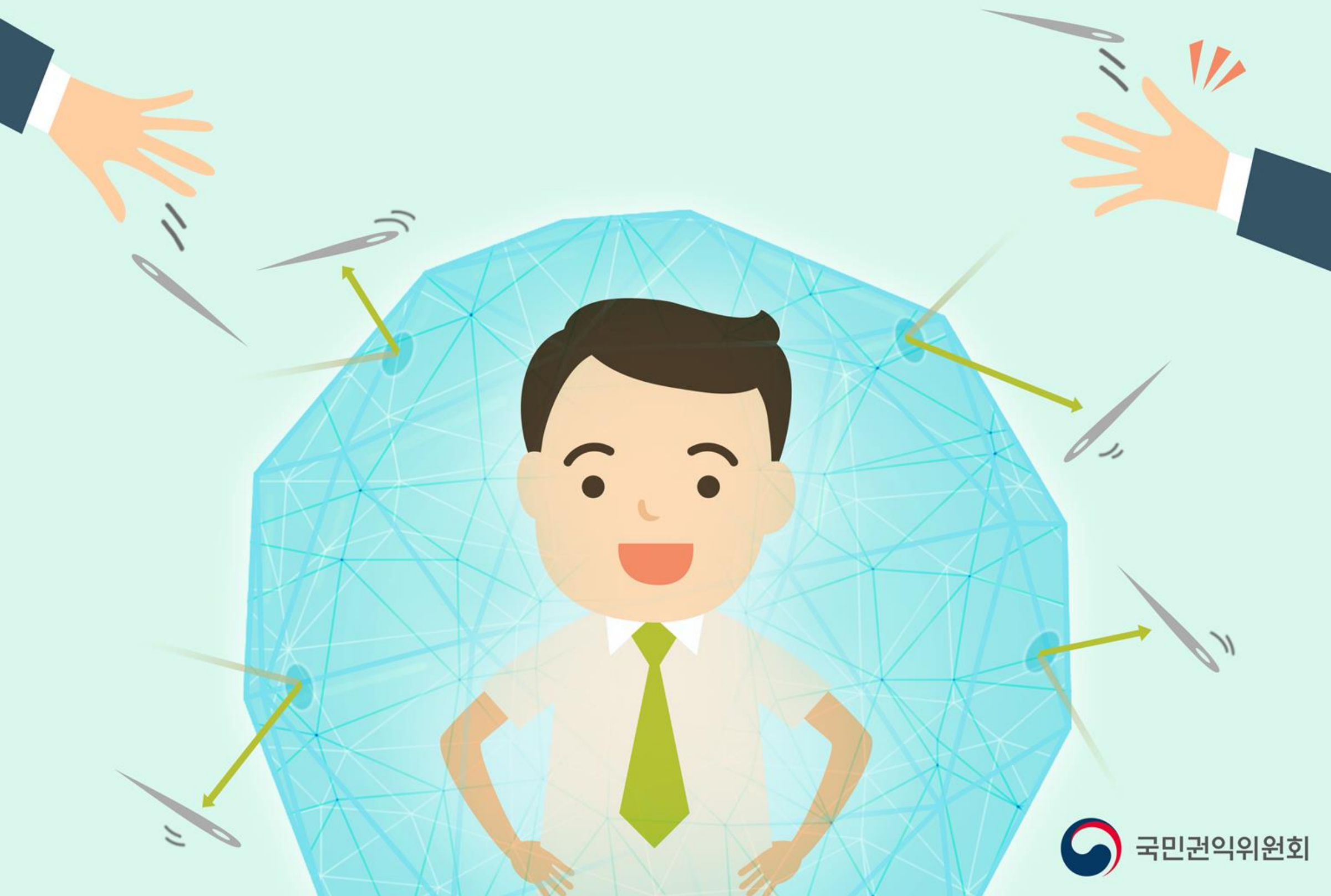


빈틈없는 신고자 보호

==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더욱 촘촘해졌습니다 ==





공익신고 대상이 확대되어

채용절차 위반행위도 공익신고가 가능해졌습니다.

3 MONTH

1月



1 YEAR



보호조치 신청기간은 불이익조치가 있던 날부터
기존 3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



보호조치 이행 여부와 추가적인 불이익 감시까지!
권익위가 2년 간 점검합니다.



긴급한 상황에서는
신속한 구조금 지급이 가능해졌습니다.



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를 하면
발생한 손해 3배 범위까지 배상

신고자 신분공개

3년 / 3천만 원

→ 5년 / 5천만 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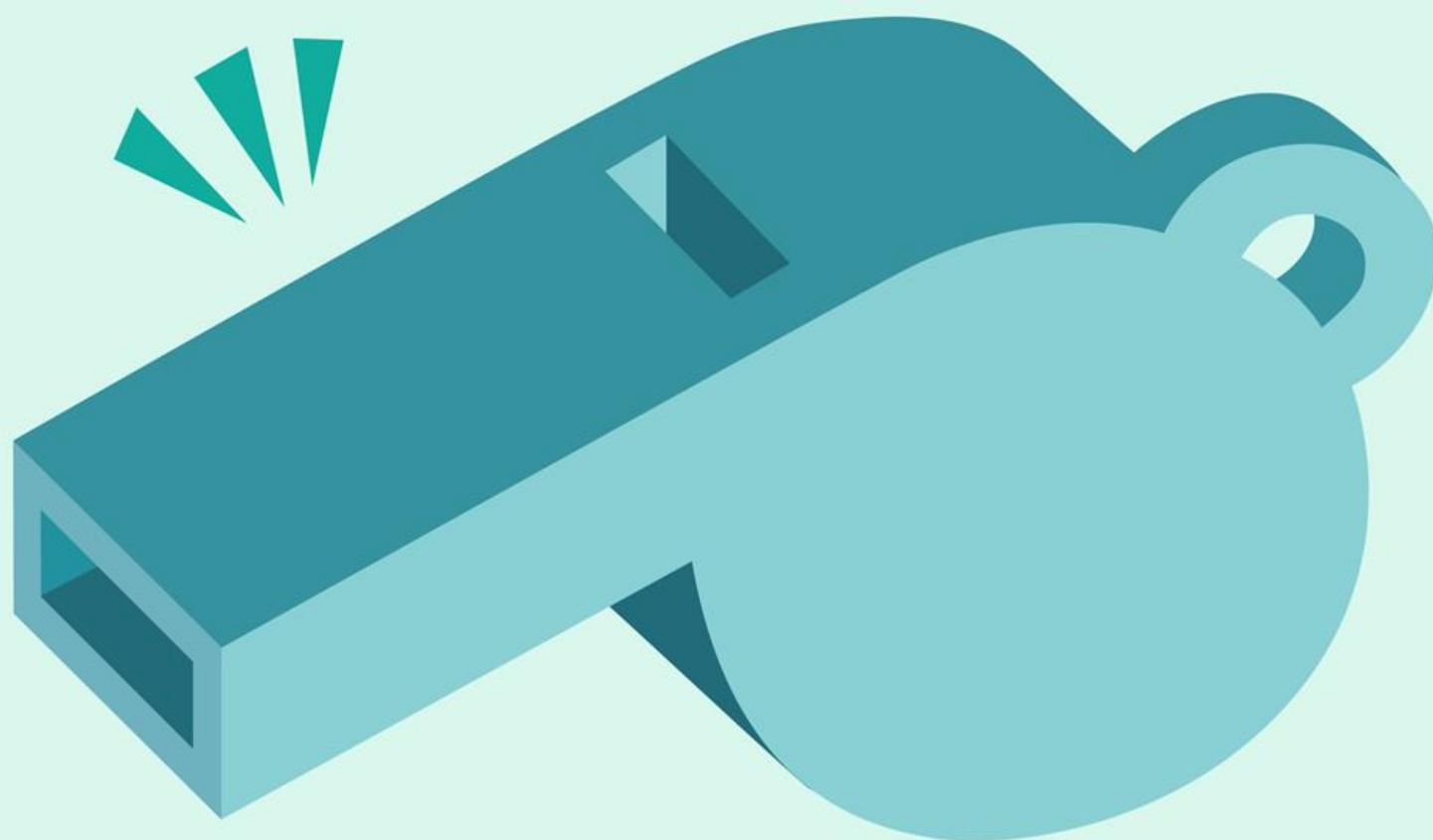
보호조치 결정 불이행

2년 / 2천만 원

→ 3년 / 3천만 원



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규정 위반 시
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



**아무 걱정 없이 소리 낼 수 있도록
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지켜드리겠습니다**



국민권익위원회